

野 '무상급식' 띄우자 與 '교원평가' 맞붙

정두언 "전교조 명단 공개하면 쟁점화될 것"

민주 "이미 논란된 사안... 다시 이슈화 의문"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카드로 한 방(?) 맞은 한나라당이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를 반전카드로 들고 나섰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은 16일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되면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학부모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달여가 지나면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교육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동시에 국회 교과위원으로서 (선거) 분위기를 밝가며 이 사안을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관련 논

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교조 명단 공개를 교원평가제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를 선거 쟁점화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이슈로 내세워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평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내부 균열마저 일어나고 있어 무상급식 카드를 상쇄할만한 교육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아가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까지 함께 치러져 교육정책의 폭발력이 어느 선거 때보다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반(反) 전교조 성향의 보수단체들이 교육감 후보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조직적으로도 선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교조 문제를 내세워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움직일 경우 교육감 선거뿐 아니

라 전체 선거구도를 흔들 만한 이념 논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되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 연수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달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를 확실히 구분할 쟁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쟁점이 한나라당 의도대로 무상급식 카드를 뒤집을 수 있는 선거쟁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무상급식 카드의 효과가 너무 커서 틀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뿐 아니라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는 새로운 쟁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수차례 사회적 논란을 겪은 쟁점이 지방선거 때 다시 이슈로 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무상급식 카드 때문에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다른 쟁점을 들고 나왔지만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효율 지상주의적 교육정책의 허점을 계속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 반발

친박계 반대도 극심... 국회 통과 여부 미지수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른바 이달말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 친 박근혜계는 물론 야당과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의 반대가 극심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교육·산업이 융·복합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조성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과학기반 투자를 위해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천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

료를 감면해주고, 특목고와 자율학교 학생을 전국적으로 모집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공개한 지 두 달 여만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야당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 내 친 박계의 반대가 극심하다.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민심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충청권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전남에서도 시장·지사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경제과파도 시로 만들기 위한 목적의 세종시 건설은 정당성도 없고 지방기업과 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만 할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정부가 이들 의견을 무시한 채 세종시 수정안을 의결한 것은 오만과 독선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세종시 수정안법은 국가 백년대계를 정권의 이해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선례를 남기고 국가정책의 안정성과 입법정책의 지속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MB정권이 전국적인 반대에도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을 또다시 경악과 불안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 법률에 따라 집행중인 국책사업을 무너뜨리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지방경제를 살리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죽이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폐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운찬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MB 지방방문 사전 선거운동 고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지방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나들이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데 대해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방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정상적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6.2 지방선거 이후 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강원 방문과 관련, "행사장에 강원지사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각급 기초단체장들을 전부 초청해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듯 했다"며 "청와대가 '정상적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그는 이와 관련, "첫번째 포괄적인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둘째 지방공무원을 모아놓고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85조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셋째 경기 방문 당시 김문수 현 지사를 떠난 것은 공직선거법 86조(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을 통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순간에 방심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정치적 일정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일차리청출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이를 독려하고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4대강·무상급식 반대에도 귀 기울여야"

李대통령 밝혀... 세종시 수정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세종시 수정 등 정부 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무상급식이든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없다"며 "그런 (반대) 목

소리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정책이 더 견실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주

장과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분명한 논리를 갖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학교 무상급식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치쟁점화 하기에 앞서 정책 쟁점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상급식이나 세종시 수정 등과 관련한 정책 전환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상수 한 원내대표 19일 광주·전남 방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광주·전남을 방문, 4대강 사업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지역 민심을 수렴한다. 안 대표는 19일 오후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 살리기 사업 6공구 승촌보 및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현장 등을 잇달아 방문,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또 광주에서 광주·전남도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등 민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정치를 통해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민주당 텃밭인 전남지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한나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들이 잇따르면서 전남 지역에서의 한나라당의 이미지 제고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회사매각공고

- ◆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 ◆ 특징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문의 : 062-523-0004

(계좌제·재직자)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노동부지정 국비 훈련기관
요리학원

●●● 방문상담대 환영 합니다! ●●●

훈련종류	훈련과정	훈련대상
계좌제	○ 한식과정 ○ 일식과정	주부, 실업자 미취업자 대학졸업 예정자
재직자	○ 한식과정 ○ 양식과정 ○ 일식과정 ○ 중식과정 ○ 제과·제빵과정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정규직·비정규직)

* 계좌제 과정은 광주고용센터(609-8500)에서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담전화 ☎
226-5500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장동로11길 11 (구 MBC) 장동로터리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

- ◆ 마니또론 신용대출
 -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추가대출, 대환대출, 채무통합, 신규대출 (7.5% 고정금리로 4년분할상환)
- ◆ 아파트론 - 무담보 아파트대출
 - 근저당설정없이 추가대출가능
 - 소득증빙, 무직자, 주부도 가능

소액필요한데
근저당설정하기 귀찮으시죠?
하나캐피탈 아파트론
이용하세요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과 한가족입니다!
www.hanacapital-manitoloan.co.kr

하나금융그룹 공식상당사 안광호 팀장
☎ 010-4041-1121

위 상담사는 여신금융협회에 정식등록된 상담사입니다

선거
홍보물 제작·시공

대형현수막
홍보물
명함
간판
배포
현판
공약집
어깨띠
광고대행

www.jwad.co.kr

중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73-2285